

#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이석기 전 의원 구명 나서



“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서울고법의 유죄 판결을 우려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한국의) 세계적 명성과 모순  
”

## 카터센터, 한국 대법원에 성명서 전달

전 주한 미 대사과 전 미국 대통령이 구속된 한국의 정치인 구명에 팔을 걷고 나섰다. 카터 전 대통령이 설립한 인권단체인 카터센터는 지난 해 12월 18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카터센터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는 우편을 통해 우리 대법원에 발송되었다. 카터센터는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 원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서울고법의 유죄 판결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카터 전 대통령 측이 이같은 성명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는 대표적인 '지한파'로 꼽히는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 대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석기 의원에 대한 판결, 국제인권조약에 모순된다 지적

성명서에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사실들의 진위에 관해 언급하거나 내정을 간섭하지 않을 것”임을 전제했다. 하지만 카터센터는 “이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1987년 이전의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매우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이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의무, 매우 성공적으로 변형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세계적 명성 등과 모순된다는 점도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카터 전 대통령은 “한국이 아시아와 세

계 정세에서 인권 지도자로서 필수적 역할을 확대하려면, 국보법 때문에 위험에 처한 인권에 관해 모든 한국 시민들이 온전히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고 성명을 통해 직접 언급하였다.

## 센터가 한국 정치인 구명 나선 것은 첫 사례

카터센터가 한국 정치인의 구명에 나선 것은 그 자체로 대단히 이례적인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보수언론은 그 의미를 격하시키기 위한 기사를 연일 쏟아내기도 하였다. '내란죄인 지도 모르고 구명 나섰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북핵문제 해법을 내놓아 2002년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한 전 미국 대통령을 한국사회에 무지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센터 방문에 함께 했던 가족 측 관계자는 “레이니 전 대사를 비롯하여 카터 전 대통령 측은 내란선동죄로 유죄판결 받게 된 사건 경과에 대하여 풍부하게 검토하였음은 물론이고 성명의 대외적 파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려하였다”고 전했다. “내란선동죄 자체가 해외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조항”이고, “결국 형법 속에 있는 ‘또 하나의 국가보안법’을 의미”한다는 것이 카터 전 대통령 측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임을 분명히 했다.

## 대법원 선고 앞두고 국제적 이목이 집중

앞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하여 노암 촘스키, 부르스 커밍스, 미셸 초서도브스키 등 전세계 지식인들이 규탄성명과 탄원서에 잇따라 동참해온 바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직면한 국제적 비난여론도 이미 적지 않다. 특히 작년 5월에는 내란음모 사건 구속자 가족들이 로마를 방문해 바티칸 측의 배려로 프란치스코 교황을 알현하기도 했다.

지난 12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가 과거로 회귀할지는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의 대상이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의 무게가 더욱 무거운 이유다.

## 내란선동 사건으로 위기에 처한 '표현의 자유', 국내외 전문가들의 우려와 지탄 이어져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의 위기' 국제 심포지엄 개최



지난해 11월 17일, 명동 포스트 타워에서는 박근혜 정권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표현의 자유' 제약에 관해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하는 자리가 있었다.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은 아래와 같다.

“내란음모 대법원 판결 놓고 대한민국 선진국 자각 있는지 평가받게 될 것”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회장

“사상에 대한 처벌은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파괴행위”  
송주영 민교협 상임의장

“내란선동 인정으로 모든 국민에 대해서 선동으로 엮어 버릴 여지 마련돼”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한국 정부의 행태는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JAN E. WETZEL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정책보좌관)

“1953년 내란선동죄 제정당시 국회에서도 거센 반발, 육군 법무실장조차 '민주주의 모독'이라며 강력히 비판”  
오재창 변호사 (전 민변 국제연대위원장)

## 퇴임 후 더 존경받는 대통령, 2002년 노벨평화상 수상

지미 카터는 민주당 출신 미국 39번째 대통령(1977년 ~ 1981년)이다. 퇴임 이후 비영리 기구인 카터 재단을 설립한 뒤 미국의 빈곤층 지원 활동, 국제 분쟁 중재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79년 대통령 재임당시 한국을 방문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긴급조치 철회와 민주인사 석방을 요청하기도 했고, 81년 내란

음모로 사형선고를 받은 김대중 전대통령의 구명운동에 나서기도 하는 등 한국과도 깊은 인연을 맺어왔다. 지난 94년 북한을 방문해 한반도 핵위기 상황 해소에 기여하기도 했다. 여러 국제분쟁을 중재하고 인권을 신장하는데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 무너진 법치주의... 대법원이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1980년 '전두환-노태우' 군사쿠데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의회쿠데타  
그리고 2014년 12월 19일, 현재쿠데타

### “2류헌재의 3류판결”

증거도 증명도 없이 ‘숨겨진 목적’을 내세워 원내3당을 공중분해시켰습니다. 권한도 근거도 없이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5석을 날려버렸습니다. ‘내란음모 무죄’ 라는 법원 판결마저 뒤엎어버렸습니다.

###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짓밟혀”

포용과 공존이 쫓겨난 빈 자리가 배제와 적대, 증오와 폭력으로 채워지려 합니다. 인간이기에 갖는 ‘말할 자유’마저 빼앗으려 합니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대법원 최종 판결로 박근혜 정권의 끝없는 정치보복, 이제는 멈춰주세요.

※ 수원구치소를 방문한 미셸 초서도브스키 교수(캐나다 오타와대)를 접견 중인 이석기 전 의원 (2014. 10. 7)